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안 연구

김진환
(통일교육원)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안 연구

김진환 (통일교육원)

목 차

I. 머리말	III. 대학 통일교육의 과거와 현재
II. 대학생 통일의식의 변화 : '통일전망'과 '통일의지'를 중심으로	IV.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안 : 방향과 과제
	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 대학생 통일의식 변화, 대학 통일교육 역사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역사를 함께 살펴본 결과, 대학생 통일의지의 오르내림이 남북관계 부침과 함께 대학 통일교육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곧 남북관계 진전 속에서 대학생 통일의지와 낙관적 통일전망이 한창 높아지던 1990년대~2000년대 초·중반은 대학 통일교육 발전기와 일치했고,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대학생의 통일의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후는 대학 통일교육 침체기와 일치했다.

둘째, 대학의 자율적 통일교육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통일 관련 교양·전공과목 증가, 북한·통일 전공학과 신설, 북한·통일 전공 대학원 증가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갔다. 대학 통일교육의 효용성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갔고, 이 영향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효용성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통일 전공학과들도 잇따라 폐지 또는 유사학과와 통·폐합되면서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도 약해졌다. 끝으

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통일교육 내용의 '편중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처럼 2017년 현재 대학 자율 통일교육이 대학생의 교육수요를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사회 대학생들은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와 대학의 유기적 협업을 제안했다. 곧 정부가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학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대학과의 유기적 협업 속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은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북한·통일 관련 과목 신설 지원, 대학 통일교육 주체와 정부의 네트워크 복원, 비교과 영역 통일교육 강화 같은 과제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 사업들 중 대학 통일교육 주체-정부 네트워크 복원을 제외한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실행되거나 활성화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대학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 접근성 향상, 교육내용의 다양성 증대, 대학생 참여도와 만족도 증가 같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대학, 통일의식, 통일교육, 유기적 협업, 통일교육 선도대학

I. 머리말

다른 주제 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 참여의지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원 역시 창설 40주년인 2012년에 교사, 학생, 군인,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외국인 등 대상별로 교육기법·내용을 차별화한 특화교육 실시를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었고,¹⁾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원내 통일교육과정 다변화,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자료 개발,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대학 통일교육 발전 등에 주력하고 있다.²⁾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 통일교육 발전은 몇 년 전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통일교육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비약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과제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고, 2017년 6월 개최된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를 두 개의 별도 섹션에서 논의하기도 했다.³⁾ 초·중·고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서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참여, 통일교육 관련 과목 확대, 대학원 통일교육 전공 개설 등을 통해 교육대학 통일교육 활성화가 초·중·고등 통일교육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배경에는 교육대상으로서 청소년⁴⁾과 차별화되는 대학생의 특수성, 한국사회 20대의 낮은 통일 의지 등이 놓여 있다.

첫째, 청소년이 머무르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통일교육의 제도화·의무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반면, 대학생은 통일교육에 참여하려면 높은 수준의 ‘자발성’을 발휘해야 한다. 청소년 통일교육의 제도화 수준은 2013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⁵⁾ 대학생 통일교육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대학 당국과 일부 교수의 의지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둘째, 대부분의 통일 의식조사에서 ‘2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의식조사에서 20대의 통일 필요(‘매우 필요’, ‘약간 필요’) 응답률은 4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고, 급기야 2015년에는 30.7%, 2016년에는 36.7%로 30%대까지 떨어졌다(표 1)]. 또한

1)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40년사』(서울: 통일교육원, 2012), p. 169.

2) 통일부, 『2017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17), pp. 198-233.

3) 이 대회에서 발표된 대학 통일교육 관련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함규진,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방안의 모색: 서울교대 사례를 중심으로”. 여현철, “국민대학교 통일·북한 강좌 및 옴니버스 특강 사업보고”. 임상순, “대학통일교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 차승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 실태와 강화 방안”. 이창희, “대학의 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박철수, “한라대학교 통일·북한 강좌 및 옴니버스 특강 사업보고”.

4)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5) 이전까지 학교통일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었는데, 2013년 개정된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제8조 제②항)며 통일교육의 제도화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은 ‘통일 의식 진단 → 맞춤형 통일교육 실행 → 통일교육 효과 측정과 평가 → 통일교육 내용·기법 개선 → 발전된 맞춤형 통일교육 실행’이라는 통일교육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성인 대상 통일교육보다 훨씬 유리하다.

같은 조사 결과, 통일에 관심이 없다거나 현재대로가 좋다고 응답한 20대는 2007년 25.2%에서 2016년 47.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표 1] 세대별 통일필요 응답률

(단위: %)

연도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60대 이상
2007	53.3	65.6	65.9	71.0	
2008	45.6	51.2	54.5	55.6	
2009	43.2	51.8	62.9	66.2	
2010	48.8	55.4	65.2	67.3	
2011	40.8	49.0	57.5	63.9	
2012	46.7	51.4	63.2	63.5	
2013	40.4	51.6	60.0	62.7	
2014	43.1	50.3	56.5	67.8	
2015	30.7	36.2	52.0	63.8(50대)*	73.1
2016	36.7	36.4	54.2	62.7	75.4

* 2015년 조사부터는 '50대 이상'을 '50대'와 '60대 이상'으로 구분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20대의 낮은 통일의지는 청소년의 통일의지 수준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통일부가 교육부와 함께 2014년부터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14년에는 53.5%가 통일이 필요('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015년에는 63.1%, 2016년에는 63.4%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이 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는 학생에게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54.2%) 응답자가 높아졌다('매우 높아졌다', '대체로 높아졌다')고 대답했다.⁶⁾

이처럼, 청소년의 통일의지는 지속적·체계적인 통일교육 효과 덕분에 20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20대 이상 성인은 통일교육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경험이 적고, 이는 20대의 낮은 통일의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대상 통일교육 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민간이 먼저 주목한 대상이 바로 현재 20대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대학·대학원생이다(표 2). 대학·대학원생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통일교육을 실행할 가능성이 그나마 존재한다. 곧, 대학 통일교육 발전이 20대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사회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를 '통일전망'과 '통일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학 통일교육을 시기별로 구분해 정리·평가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6) Research & Research,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6).

정리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 ‘진단’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안이라는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2] 전국 대학 현황 및 20대 인구 중 대학·대학원생 비율

구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20대 인구 중 대학·대학원생 비율
전문대학	138	6,104	697,214	51.7%*
교육대학	10	141	15,903	
대학	189	11,329	2,084,807	
방송통신대학	1	33	184,074	
산업대학	2	650	33,245	
기술대학(대학과정)	1	2	97	
기술대학(전문대학과정)	-	1	1	
각종학교(대학과정)	2	35	3,544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	0	0	
사이버대학(대학과정)	17	291	114,496	
사이버대학(전문대학과정)	2	40	5,561	
원격대학(대학과정)	1	11	1,071	
원격대학(전문대학과정)	1	14	2,153	
사내대학(대학과정)	3	4	333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5	7	445	
전공대학	3	42	11,939	
기능대학	11	240	28,956	
대학원	1,195	15,346	332,768	
합계	1,581	34,290	3,516,607	

* 학생수 합계(3,516,607) ÷ 2017년 10월 현재 20~29세 인구(6,799,256) × 10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II. 대학생 통일의식의 변화 : ‘통일전망’과 ‘통일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이후 남북 당국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 대학생의 통일의식을 실증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 수준 조사⁷⁾ 중 하나인 ‘대학생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수준 통일의식조사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초반 남북 당국대화 이후 비로소 활성화됐기 때문이다.⁸⁾ 대학생의 통일의식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객관적 통일 가능성 또는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통일전망),

7) 양적 조사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전국 수준 조사와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한정해 특정 집단을 조사하는 특정 수준 조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2호 (2004), pp. 112~114.

8) 1980년대까지 대학생 통일의식 서술은 아래 글을 참조했다.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호 (2015), pp. 74~76.

객관적 상황과는 별개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의사를 묻는 질문(통일의지)을 중심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데,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통일의식 조사는 주로 통일전망 확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민족 담론, 곧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을 내세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통일이 필요한지를 묻기보다는 통일 가능성 또는 예측하는 통일 시기를 주로 질문했던 것이다.

1970년대 중·후반 실시된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대학생들은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중단된 남북 당국대화에 대한 실망, 1976년 8월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같은 북한 도발행위 등의 영향으로 비관적 통일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75년 1월 27일~2월 4일 부산대 재학생 5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가 통일은 '불가능하다', 35.2%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대답했을 정도다. 또한 "남북대화로서 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연 기대하지 않는다'에 39.7%, '대체로 기대하지 않는다'에 38.2%가 대답했다.⁹⁾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가 1977년 경상·충청·전라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과 전문 및 대학 재학생 총 3,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관적 통일전망이 엿보인다. 학생들의 40.16%는 통일이 '영원불가하다고 대답했고, '50년 이내'라는 응답이 11%, '30년 이내'라는 응답이 23.59%에 달했다.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17.99%, '5년 이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통일자체의 성취에 회의적인 의견"을 갖게 된 주요 이유로 남북대화 부진과 함께 1976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8·18사건'을 꼽았다.¹⁰⁾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점수가 1979년에 같은 방법으로 충청·호남·영남지역 대학생 683명을 조사한 결과 '영원불가' 비중은 약간 떨어졌지만, '30년 이내'와 '50년 이내'는 10% 정도 늘어났고, '10년 이내'와 '5년 이내'는 10% 정도 줄어들었다. 한점수는 이러한 비교결과에 대해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의 통일은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¹¹⁾

1980년대 대학생들의 통일전망 역시 비관적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전두환 정부가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 제안을 수락하고(1984년 9월 14일), 1차 남북경제회담 개최(1984년 10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1984년 11월 20일) 등으로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1월 대구지역 대학생 809명 중에서 당시 북한의 태도변화가 곧 북한의 대남적 화통일 포기라고 생각한 학생은 불과 0.9%(7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불가피한 변화(47.6%)였거나 북한 대남전략전술의 한 표현(33.3%)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이 절대로 남침할리 없다는 의견을 밝힌 학생은 14.8%에 그쳤고, 30.0%는 자원입대해서 싸우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남북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9.2%가 '우리세대는 어렵다', 25.6%가 '비교적 불가능'이라고 대답한 배경에는 이처럼 부정적인 대북의식이 놓여 있었다.¹²⁾

9) 박준용, "남북대화가 남북통일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반응연구-한국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구조분석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제17권 (1975).

10) 이우영·한점수·김상한·홍양표, "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의식에 관한 조사와 그 강화책," 『평화연구』, 제2집 (1977).

11) 한점수, "대학생의 국가안보 및 질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평화연구』, 제5집 (1979), pp. 96~97.

12) 이창우·임경희, "대구지역 대학생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제12집 (1986);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pp. 77~82.

한국 대학생의 통일의식은 19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반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1994년 11월 전국 대학생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30.6%가 가급적 빨리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고, 무려 84.9%가 통일비용 부담 의향(‘많이 있음’ 28.1%, ‘어느 정도 있는 편임’ 56.8%)을 밝혔다.¹³⁾ 1997년 수도권 지역 대학생 647명 조사 결과도 대학생들의 달라진 통일의식을 보여준다. 통일시기에 대해 ‘5-9년’ 응답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10-19년’이 34.6%로 뒤를 이었다. ‘5년 이내’ 통일될 것이라는 응답자도 9.8%나 됐다. 또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가정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자(‘기꺼이 진다’ 22.6%, ‘약간 진다’ 40.3%)도 62.9%나 될 정도로 여전히 높은 통일의지를 드러냈다.¹⁴⁾ 같은 해 9월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20개 대학 재학생 1,042명에게 남북 통일시기를 물어 봤을 때는 응답자의 57.2%가 10년 이내(‘5~10년 이내’ 38.8%, ‘5년 이내’ 18.4%) 통일을 예상하기도 했다.¹⁵⁾ 끝으로 1999년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이 전국 대학생 322명의 통일의식을 확인한 결과, 절대 다수인 73.0%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35.1%가 10년 이내(‘5년 이내’ 7.1%, ‘10년 이내’ 28.0%) 통일을 전망했다.¹⁶⁾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남북 화해·협력이 진전되자 낙관적 통일전망에 더해 통일의식의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오랜 분단,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당위적 통일론의 설득력이 약해지면서, 대부분의 통일의식조사에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는데, 통일 필요 응답률을 보면 통일의식의 변화 추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2004년 8월~10월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대학생 600명 중 68%가 통일이 필요하다(‘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8.5%, ‘이루어지면 좋겠다’ 39.5%)고 대답했고, 53.5%가 통일이 가능하다(‘매우 가능성이 있다’ 6.5%,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47.0%)는 의견을 밝혔다.¹⁷⁾ 통일 가능성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14.2%로 앞에서 소개한 1985년 조사의 ‘비교적 불가능’ 응답률과 비교해보면 비관적 통일전망이 약 10%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다만, 통일 시기의 경우 2004년의 대학생들이 1997년, 1999년의 대학생들보다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이의 배경에는 통일방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달라진 인식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4년 대학생들 중에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학생은 13.9%(‘5년 이내’ 1.0%, ‘10년 이내’ 12.9%)에 불과했다. 1997년에 비하면 약 30%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다. 흥미로운 점은 1997년에는 3분의 2 이상이 남북한 간 사회경제적 격차와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한의 흡수통일을 예측한 데 반해,¹⁸⁾ 2004년에는 남북한 간 합의통

13) 「매일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

14) 편집부,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제고방안-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안보, 국가현실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6집 (1997), pp. 270~274.

15) 「한겨레」, 1997년 10월 20일.

16)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p. 37~40.

17)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청소년 통일 무관심 실태와 해결방안』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p. 248~262.

18) 고등학생·대학생에게 함께 질문한 결과다. 29.3%는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연합형태 통일을 예상했다. 편집부,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제고방안-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안보, 국가현실에 관한 의식조사,” p. 271.

일을 가장 많이 예측했다(표 3). 북한붕괴론이 유행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체제위기가 1997년 대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면, 2004년 대학생들의 인식에는 당시 북한경제 회복세,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대학생의 통일방법 선호 (2004년)

“앞으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흡수해 통일할 것이다	139	27.7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통해 통일을 이룰 것이다	286	57.0
강대국의 도움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39	7.8
혁명과 전쟁을 통해 될 것이다	11	2.2
기타	18	3.6
무응답	9	1.8
합계	502	100.0

※ 출처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청소년 통일 무관심 실태와 해결방안』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 257.

위에 소개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조사가 한 차례로 그친 것과 달리,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8차례(2008년~2009년, 2012년~2013년, 2016년~2017년 제외)에 걸쳐 대학생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조사 결과는 매년 같은 비슷한 규모의 대학생에게¹⁹⁾ 통일 필요성을 묻은 덕분에 대학생 통일의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통일교육’ 관련 질문이 들어감으로써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다.²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04년에는 응답자의 71.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답했고, 2005년에도 68.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06년에는 1차 북핵 실험 여파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²¹⁾ 통일 필요 의견이 78.3%를 기록했다. 2007년에도 통일 필요 의견이 7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부정적 대북인식은 떨어졌다.²²⁾ 조사 직전 이루어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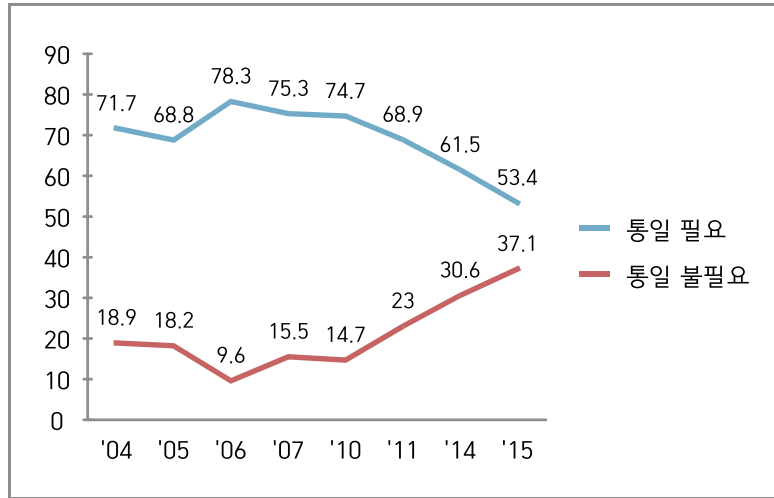
19)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였고, 조사대상 대학생 숫자는 매년 1,000~1,500여 명 수준이었다. 2004년~2007년에는 서울 소재 대학생, 2010년부터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각 년도 조사결과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uni.yk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통일교육 관련 조사 결과와 시사점 등은 아래 ‘III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21) 2006년 조사는 1차 북핵 실험 직후인 11월에 실시됐다. 북한이 위협적(‘매우 위협적’, ‘위협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4년 42.5%에서 2005년 31.0%로 떨어졌다가, 2006년 45.0%로 오히려 2년 전보다 높아졌다.

22) 2007년부터는 ‘위협’ 대신 ‘경계’(‘경계 대상’, ‘매우 경계’)라는 지표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측정했다. 2007년에는 응답자의 33.6%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림 1] 2000년대 대학생의 통일의지 변화



※ 출처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

이처럼 2000년대 초·중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대학생의 통일의지는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0년의 경우 74.7%로 2007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부정적 대북인식은 52.1%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2010년부터는 통일을 원하는 이유를 묻기 시작했는데, 민족 당위성보다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후 통일 필요 의견은 2011년 68.9%, 2014년 61.5%, 2015년 53.4%로 떨어졌고, 통일 불필요 의견은 2007년 15.5%에서 2015년 37.1%로까지 올라갔다(그림 1). 통일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생 1,2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실시한 조사 때도 통일이 필요하다(‘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3.5%, ‘큰 부담이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 53.1%)는 응답이 66.6%를 기록했다.²³⁾ 그런데, 통일 이유로 ‘평화’를 선택한 비율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표 4), 2015년 통일교육협의회 조사 때도 26.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표 5). 다시 말하면 통일을 원하는 대학생 사이에서는 통일이 평화정착의 중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표 4] 통일을 원하는 이유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사

(단위: %)

연도	민족의 동질성 회복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평화증진	경제성장	국가위상 제고	기타
2010	25.5	39.1	16.7	12.1	4.5
2011	25.4	36.8	19.2	11.0	4.1
2014	23.5	37.6	25.4	7.4	3.5
2015	24.4	35.8	25.3	7.2	4.5

※ 출처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

23) Research & Research, 『2015년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p. 7.

[표 5] 통일을 원하는 이유 : 통일교육협의회 조사

(단위: %)

연도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한반도의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가 늘어나 나의 취업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타
2015	26.1	23.6	14.4	14.1	13.4	7.6	0.7

※ 출처 : Research & Research, 『2015년 대학생 통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p. 8.

Ⅲ. 대학 통일교육의 과거와 현재

대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통일인식은 지난 70여 년 간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과 세계사적 사건들 등에 영향을 받아 계속 변화해왔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비관적 통일전망과 낮은 통일의지가,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이 가속화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맞물릴 때는 낙관적 통일전망과 높은 통일의지가 확인된다.²⁴⁾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의 통일인식 하락 시기에 남북관계 뿐 아니라 대학 통일교육도 점진적으로 후퇴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2017년 현재 대학생의 통일의지가 2000년대 초·중반 대학생의 통일의지에 비해 낮아진 배경에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악화와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대학 통일교육의 점진적 후퇴도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1970년대 남북 당국대화 실패 이후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때맞춰 ‘반공교육’이 본격화된 시절 대학생의 통일전망이 전반적으로 비관적이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체계적·지속적 교육과 대학생 통일인식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이 걸어온 길을 시간 순으로 돌아볼 것이다.

1. ‘국민윤리’ 과목을 통한 반공교육 : 1970년대~1980년대

세계사적 냉전과 남북대결이 한창이던 1970년대~1980년대 대학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념교육, 반공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제8조 ③)며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과거 대학 이념교육, 반공교육은 대학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었다.²⁵⁾

24)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인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호 (2015).

25)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3집 3호 (2015), p. 176.

정부는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이념교육, 반공교육을 강화했고,²⁶⁾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0년 2학기에 대학 교양과목으로 ‘국민윤리’가 신설됐다. 개설 초기 국민윤리는 대학 교수들이 문교부의 ‘국민윤리교수요목’(표 6)에 맞춰 개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강의하던²⁷⁾ 교양선택과목이었으나, 1974년 8월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개정으로 교양필수과목이 됐다(표 7).

[표 6] 문교부 국민윤리교수요목 (1970년)

제1장 국민윤리의 기본	제1절 인간존재 / 제2절 인간의 사회성 / 제3절 윤리의 본질
제2장 역사와 민족	제1절 민족사의 정화 / 제2절 세계사와 한국 / 제3절 민족중흥의 과제 / 제4절 전통과 창조
제3장 민주주의의 확립	제1절 민주주의의 이념과 전개 / 제2절 민주주의 제도와 실제 / 제3절 자유와 통제 / 제4절 한국적 민주주의의 확립
제4장 공산주의의 도전	제1절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 / 제2절 공산권의 다원화 및 분열 / 제3절 북한의 현실 (1) / 제4절 북한의 현실 (2)
제5장 민족의 진로	제1절 세계사의 방향 / 제2절 근대화 작업 / 제3절 승공통일 / 제4절 조국의 미래상

※ 출처 : 한승조, “국민윤리교육의 회고와 전망,” 『윤리연구』, 10권 (1980), pp. 133~134.

[표 7] 대학 ‘국민윤리’ 관련 조문 개정 연혁

개정일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비고
1971. 3. 2	일반교양과목으로는 국민윤리·국어·철학개론·문화사·자연과학·체육·교련·외국어 및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과한다.	국민윤리 일반교양과목으로 첫 명시
1974. 8. 14	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 과하되, 국민윤리·한국사·교련·체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윤리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
1989. 2. 28	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성화학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윤리 필수교양과목에서 제외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6) 조성대, “한국 이념교육의 변천과정과 방향: 대학의 이념교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논문집』, 13, (1984), p. 556.

27) 한승조, “국민윤리교육의 회고와 전망,” 『윤리연구』, 10권 (1980), pp. 133~135; 이석재, “대학 교양국민윤리 I의 현황 분석,” 『통일논총』, 8 (1986), pp. 81~82.

이처럼 국민윤리가 필수과목이 되면서, 국민윤리교육연구회는 1975년에 『인간과 국가』(삼화출판사)라는 교재를 발간해 각 대학에 채택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조정해가기 시작했다.²⁸⁾ 『인간과 국가』는 문교부 ‘국민윤리교수요목’의 공산주의 도전을 공산주의 비판으로 바꾸면서 공산주의 이론비판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⁹⁾ 이후 국민윤리 교육은 국민윤리교육연구회가 1978년 발간한 『현대국가와 윤리』(형설출판사), 1980년 발간한 『현대사회와 윤리』(형설출판사), 국민윤리학회³⁰⁾가 1981년 발간한 『현대사회와 윤리 I, II』(형설출판사)를 주교재로 진행됐다.³¹⁾

1982년부터는 국민윤리 교육의 제도와 내용 모두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 제도적으로는 국민윤리 교육 강화정책에 따라 3학점에서 4학점(한 학기 2학점씩 2학기에 걸쳐 ‘국민윤리 I’, ‘국민윤리 II’ 수강)으로 늘어났고,³²⁾ 이에 맞춰 국민윤리학회도 1982년에 『국민윤리 I, II』(형설출판사)를 편찬해서 내놓았다. 둘째, 1982년판 『국민윤리 I, II』와 1981년판 『현대사회와 윤리 I, II』의 북한·통일 관련 목차를 비교해보면 1982년 교재부터 북한 실상이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장에서 독립해 좀 더 상세히 서술됐고, 통일을 둘러싼 국제환경과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평화정책·통일정책(통일방안) 소개 등의 분량이 크게 늘어났다(표 8)). 반공·반북교육에 집중했던 국민윤리 과목이 기본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북한·통일 관련 지식·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변화다.

28) 한승조, “국민윤리교육의 회고와 전망,” p. 135.

29) 조성대, “한국 이념교육의 변천과정과 방향: 대학의 이념교육을 중심으로,” p. 574.

30) 국민윤리교육연구회는 1980년 12월 국민윤리학회, 1985년 8월 한국국민윤리학회, 2007년 1월 1일 한국윤리학회로 개칭했다.

31) 국민윤리학회의 적극적인 교재 출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의 자체적인 교재 개발도 계속되어 1982년까지 70여 개 이상의 교재가 발간됐다. 이석재, “대학 교양국민윤리 I의 현황 분석,” p. 82.

32) 이석재, 위의 글, p. 85.

[표 8] 국민윤리 교재 북한·통일 관련 내용 비교

『현대사회와 윤리 I, II』(1981)	『국민윤리 I, II』(1982)
<p>제4장 공산주의 비판</p> <p>제4절 북한의 실정(2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의 권력구조(272) 2. 경제적 파탄의 원인(279) 3. 사회, 문화, 교육의 실태(284) 4. 군사 및 외교의 동향(296) 4. 무력적화통일 전략(307) 	<p>제2장 공산주의 이론과 실상</p> <p>제3장 북한공산주의의 특징과 비판(318)</p> <p>제1절 북한 공산정권의 수립(3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318) 2. 북한 공산정권의 비정통성(323) 3. 숙청과 김일성1인 지배체제(326) <p>제2절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와 체제적 특징(3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본질(330) 2.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특징(340) 3.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도전(348) <p>제3절 북한사회의 특징(35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생활의 기본방식(353) 2. 사회생활의 실제(356) 3. 문화정책과 전통문화(362) <p>제4절 북한의 무력통일정책과 대남전략(3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관(372) 2. 대남전략·전술(373) 3. 대남도발 책동(381)
<p>제7장 민족의 진로</p> <p>제1절 민족통일의 길(39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의 최대과업(395) 2. 격동하는 국제사회(398) 3.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민족사적 정통성 인식(402) 4. 평화통일의 길과 우리의 통일정책(408) 	<p>제5장 민족의 생존과 통일의 길(421)</p> <p>제1절 4강관계와 한반도의 통일문제(4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중공관계(424) 2. 미·일·중공 협력관계(427) 3. 미·일의 한반도정책(429) 4. 소·중공의 한반도정책(431) <p>제2절 한반도의 특수상황(4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학적 위치(431) 2. 남북한의 집단안보체제(433) 3. 분단과 대결의 경위(434) <p>제3절 남북한의 평화정책(43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반도평화의 개념(437) 2. 평화에 대한 제약요인(439) 3. 남북의 평화정책 비교(442) 4. 평화제도화 방안비교(445) <p>제4절 남북한의 통일정책(44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의 개념(447) 2. 통일의 당위성과 제약성(448) 3.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입장비교(450) 4. 한국의 통일3대원칙(457) 5. 북한의 연방제안과 그 모순성(460) <p>제5절 생존과 통일의 길(46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존의 길 : 부강국의 건설(466) 2. 통일의 길 : 통일의 미래상(468) 3. 통일역군으로서의 자아정립(469)

* 괄호 안은 시작 쪽수.

※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1986년에 문교부 국민정신교육관실 통계자료를 토대로 대학 국민윤리 교육 실상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당시 836명의 교수(전담교수 410명, 외래강사 426명)가 무려 199,048명에게 국민윤리를 강의했다(표 9). 학 학급당 50명 이하는 19%에 불과했고, 80% 가까이가 한 학급당 50~200여 명이었으므로(표 10) 강의는 주입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³³⁾

[표 9] 대학 국민윤리 강좌 운영 실태 : 전담교수 및 외래강사 담당학생 총수

구분	전담교수	외래강사	계
학생수	104,807	94,241	199,048
비율	52.7%	47.3%	100%

※ 출처 : 양홍모·이준구, “대학교양 국민윤리 교과운영 실태,” 『국민윤리연구』, 제26호 (1988), p. 248

[표 10] 대학 국민윤리 강좌 운영 실태 : 학급현황

구분	50명 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명 이상	계
학급수	434	1,195	587	61	5	2,282
비율	19%	52.4%	35.7%	2.7%	0.2%	100%

※ 출처 : 양홍모·이준구, “대학교양 국민윤리 교과운영 실태,” 『국민윤리연구』, 제26호 (1988), p. 248

실제로 당시 대학생들도 이러한 주입식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2년 6월 서울·충청·영남·호남지역 6개 대학 ‘국민윤리 II’ 수강생 866명에게 “공산주의비판교육 방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압도적 다수인 82.2%가 ‘학생들끼리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식 강의방법’을 선택했고, ‘교수가 주관적,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것’은 6.2%, ‘수백 명을 단위로 하는 특별강연식’은 5.1%에 그쳤다.

교육 내용 만족도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같은 조사에서 “승공교육의 일환인 국민윤리의 과목을 수강해 본 결과 어떤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되는가?”라고 묻자 26.9%가 ‘공산주의의 비판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대답했고, ‘북한의 실상 등을 잘 알게 되었다’(10%), ‘우리 체제(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다시 한 번 흥미하게 되었다’(14.5%)고 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다’(27.0%)거나 ‘그저 그렇다’(21.5%)고 대답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국민윤리 강좌 실시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에서 공산주의비판 과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0.8%가 필요하다(‘꼭 필요하다’ 35.9%, ‘필요하다’ 44.9%)고 대답했고, 승공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71.0%가 ‘중·고등학교는 도덕, 반공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을 정도다.³⁴⁾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이 1987년 22개 대학 1,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9.3%가 국민윤리 과목 필요성을 인정했다.³⁵⁾

33) 양홍모·이준구, “대학교양 국민윤리 교과운영 실태,” 『국민윤리연구』, 제26호 (1988), pp. 245~254.

34) 최근혁, “대학에 있어서의 승공교육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승공논문집』, 2 (1995).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학 국민윤리 과목은 과거 학내외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비판의 핵심은 ‘국책과목’, ‘어용과목’인 국민윤리를 필수교양과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⁶⁾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의 경우 이러한 비판 속에서 국민윤리의 필수교양과목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989년 1학기부터 ‘국민윤리 I’만 담당하고, ‘국민윤리 II’는 인문·사회대 5개 학과에 신설된 8개 과목의 교과명으로 나누어 강의하는 자구책을 마련해보기도 했다.³⁷⁾ 하지만 결국 국민윤리는 1989년 2월 「교육법 시행령」 개정³⁸⁾에 따라(표 7) 필수교양과목에서 제외됐다.

2. 대학 자율 통일교육 활성화 :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앞의 서울대학교 사례로도 알 수 있듯 1989년부터는 기존 국민윤리를 대체하는 교양과목들이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에 문교부가 대학 국민윤리 과목 존폐 여부를 대학에 일임하면서³⁸⁾ 대학의 자율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됐다.

무엇보다, 1994년 동국대학교를 필두로 1995년 명지대학교, 1996년 관동대학교, 1997년 고려대학교, 1998년 조선대학교와 선문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설립되고, 2001년에 인제대학교에 통일학부도 신설됨으로써 일반교양 수준보다 좀 더 깊이 있는 통일교육 수요도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됐다.

대학원 수준 통일교육 역시 신설 북한학과 석·박사 과정, 북한·통일 관련 특수대학원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표 11)).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부(교양, 전공)에서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통일교육 체계가 대학 안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35) 정세구, “국민윤리교육의 교과운영에 관한 연구: 대학교양 ‘국민윤리’ 교과운영의 개선을 위한 기본과제,” 『국민윤리 연구』, 제28호 (1989), p. 220.

36) 아래에 소개하는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의 토로는 당시 국민윤리 과목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교과운영의 주창자로서, 학년도 초에 서울대학교 자율적 발전방안연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교양 ‘국민윤리’ 공청회(1988. 5. 18)에서 교과수호론을 개진하는 도중, 인문·사회대 관계학과의 발표·토론교수들로부터 ‘국민윤리’에 대한 비판일변도의 집중포화를 맞고 공방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의 이성을 내걸고 가장 민주적인 인사로 자처하면서 ‘국민윤리’를 국책과목, 어용과목으로 매도하는 사람치고 ‘국민윤리’의 교재 한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세구, 위의 글, p. 215, p. 217.

37) 정세구, 위의 글, p. 222.

38)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p. 55.

[표 11] 북한·통일 관련 대학원 설치 현황 (1999년)

학교명	대학원명	전공 또는 학과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북한학과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군사정책학과, 북한관광개발학과, 북한사회복지학과, 북한정치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안보학과, 외교국방학과, 전략정보학과, 정책학과, 통일정책학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경제협력전공, 군사·안보전공, 사회개발전공, 정치·통일전공, 정치행정전공, 통일정책전공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교육문화정책학과, 사회복지정책학과, 안보정책학과, 통일정책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 및 지역연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

※ 출처 :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100.

1990년대 이후 북한·통일 관련 과목 개설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는 1997년 조사 자료와 1999년 조사 자료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이 1997년에 입수 가능한 대학 과목 요람을 가지고 집계한 데 따르면, 조사 대상 103개교 가운데 북한·통일 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39%인 40개교였다. 이 중 8개 대학이 2과목 이상을 개설했고, 나머지는 한 과목을 개설했다([표 12]).³⁹⁾ 이에 비해 1999년 한만길 등이 전국 167개 대학(1998년 기준 4년제 156개, 교육대학 11개) 중 32개 대학을 표집 조사했을 때는 72%인 23개 대학에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2과목 이상 설치 대학은 23개 대학 중 10개였다([표 13]).⁴⁰⁾

39) 이우영, 위의 글, p. 56. 필자는 2017년 12월 4일 이우영을 만났을 때, 그가 1997년 확인한 북한·통일 관련 과목이 교양과목에 국한된 것인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우영은 당시 '북한학과'를 제외한 전공·교양과목을 모두 집계했는데 대부분 교양과목이었고 전공과목은 정치외교학과 같은 일부 학과에서 몇 과목 개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40)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p. 89

[표 12] 대학 북한·통일 관련 과목 개설 현황 (1997년)

과목명	숫자
통일문제·한반도 통일론	10
북한의 정치	6
북한의 이해·북한학	14
북한의 정치와 사회	6
북한 경제	1
북한 사회의 이해·북한 문화	13
총계	50

* 전국 대학 전수조사가 아니라 103개 대학 샘플 조사

※ 출처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p. 56.

[표 13] 대학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현황 (1999년)

지역	대학	과목명
서울지역	성신여대	남북문제와 통일문화창조/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	북한 사회의 이해/남북한 경제
	숙명여대	북한의 이해/통일정책연구/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성균관대	민족통일론
	연세대	분단과 통일/북한의 정치와 사회/남북한 관계론
	동국대	북한 사회의 이해
	이화여대	북한 지역문화와 생활/북한정치론
영남지역	건국대	북한학
	동의대	북한 사회의 이해/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경상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경인강원지역	부산대	북한 사회의 이해/민족 분단과 통일문제
	경기대	북한사회의 이해
	인천교대	북한학
	한신대	민족해방과 분단/북한 문학의 이해
	아주대	북한 사회의 이해
호남지역	강원대	북한 사회의 이해
	전남대	북한사회론
	조선대	북한 사회의 이해/한반도와 국제관계
	동신대	북한사회학
충청지역	전주교대	북한연구
	대전대	통일문제/북한론
	한남대	통일문제의 이해
	충북대	북한정치와 통일문제

* 전국 대학 전수조사가 아니라 지역별로 32개 대학 샘플 조사

※ 출처 :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90.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북한·통일 관련 과목을 실제 학생들은 얼마나 수강했을까? 1999년 조사의 경우 학교에 북한·통일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밝힌 대학생 중 20.2%가 수강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자기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강좌는 대부분 교양 강좌(88.0%)였다. 흥미로운 점은 수강생의 35.1%가 ‘구태의연한 강의내용’을 통일 관련 강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강의자료의 부족’(12.9%), ‘강의식 위주의 교육방법’(12.3%), ‘교수위원의 전문성 미흡’(7.0%), ‘강의시간의 부족’(3.5%)이 뒤를 이었다.⁴¹⁾ 통일교육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대학생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북한·통일 관련 강좌가 확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지식을 획득한다는 대학생들도 늘어났다. 1999년 조사 때는 7.8%만이 ‘학교 교육’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을 획득한다고 대답했는데,⁴²⁾ 2004년에는 13.2%(전국대학 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조사 결과), 14.6%(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사 결과)가 ‘학교수업’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지식을 획득한다고 대답했다.⁴³⁾ 북한·통일 관련 지식·정보 제공 수단으로서 통일교육이 지닌 효용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리하면, 국민윤리를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매년 20만 명 가까운 이들에게([표 9]) 북한·통일 관련 내용을 가르치던 1980년대 중반에 비하면, 1990년대 이후 대학 통일교육은 양적으로는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⁴⁴⁾ 하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통일교육은 과거 반공교육이 북한을 경계하는 측면이 너무 강해 통일의지를 높이거나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를⁴⁵⁾ 토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표 12], [표 13]의 과목명에서도 드러나듯 민족공동체 의식 제고, 객관적 북한 이해, 통일 관련 국제적 시야 확대, 남북관계사 이해 등 통일에 필수적인 인식 제고를 추구했다. 곧, 1990년대 이후 대학 통일교육은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발전을 지향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 확대, 통일교육의 효용성 상승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대학 자율 통일교육 침체 : 2000년대 중반 이후

하지만,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2005년을 지나면서 대학 통일교육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견된다. 북한·통일 관련 지식·정보 획득 수단으로서 통일교육이 지닌 효용성이 빠르게 떨어진 것이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수업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대학생 비율은 2004년 14.6%에서 2005년 9.9%로 떨어진 뒤, 2014년까지 전반적 하락세를 보여준다([그림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

41) 한만길 외, 위의 책, pp. 93-94.

42) 한만길 외, 위의 책, p. 50.

43)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청소년 통일 무관심 실태와 해결방안』, p. 283.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04년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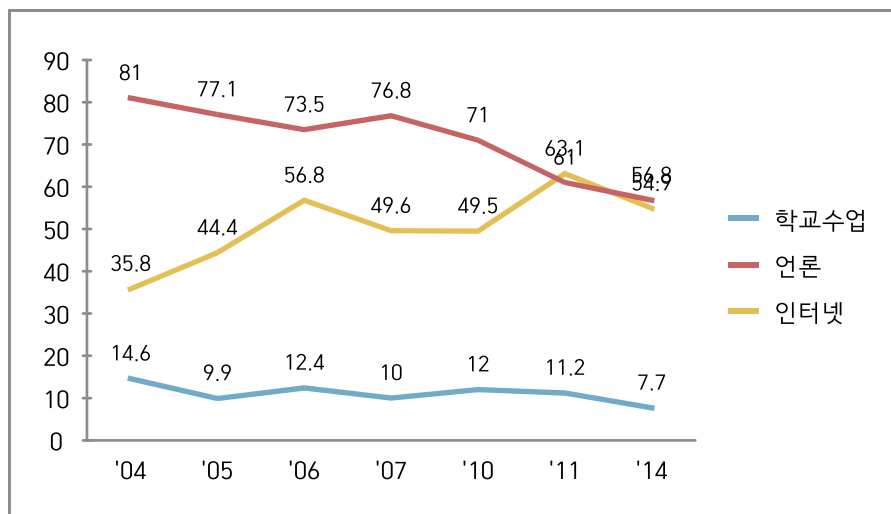
44)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 56.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p. 177.

45) 황병덕,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및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43.

다. 위 기관이 2004년 5월 대학생 1,270명에게 통일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매체를 물었을 때는 14.2%가 학교수업을 꼽았지만, 2009년 9월 20대 청년들은 7.2%만이 학교수업으로 통일의식을 형성했다고 대답했다.⁴⁶⁾ 2007년 한 연구에서도 대학 강의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대답한 대학생은 7.3%에 불과했다.⁴⁷⁾

반면에,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미디어 등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대답한 대학생들은 2004년 35.8%에서 2014년 54.9%로 빠르게 늘고 있다(그림 2). 그런데 이 결과를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학 통일교육의 효용성 하락을 단순히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급성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청소년은 대학생과 똑같이 인터넷 급성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학교수업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률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응답 항목이었던 ‘TV/라디오/신문/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2015년부터는 ‘TV/라디오’, ‘인터넷/블로그/SNS 등’으로 구분한 결과, 학교수업이 ‘인터넷/블로그/SNS 등’을 앞서기도 했다(그림 3).

[그림 2] 북한·통일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 대학생



* 응답자는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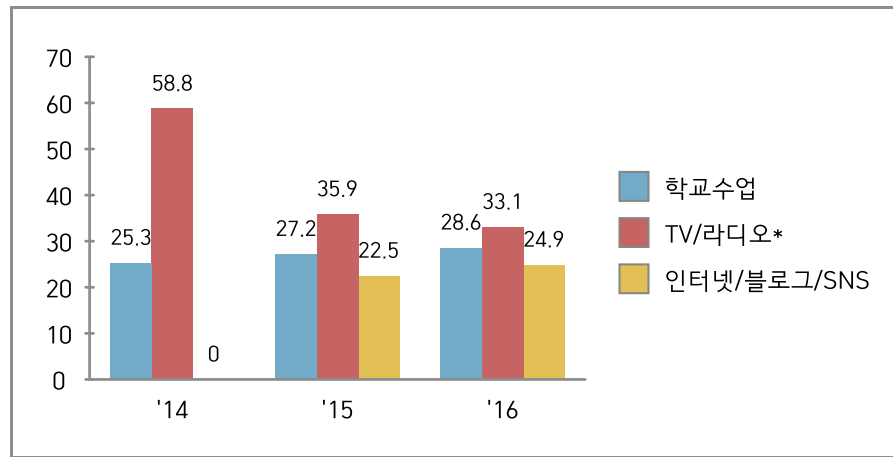
** 2011년부터 ‘언론’은 ‘TV·중이신문’으로 변경. 2014년에 ‘인터넷’은 ‘포털, 온라인미디어’로 변경

※ 출처 :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

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uac.go.kr>)에 게시된 대학생 평화·통일의식조사(2004), 청년 통일의식조사(2009) 결과.

47) 안득기, “북한 및 통일의식 분석-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 (2011).

[그림 3] 북한·통일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 청소년



* 2014년 응답 항목은 'TV/라디오/신문/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 출처 : 통일부·교육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그렇다면 대학생과 청소년의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주목할 점은 지난 몇 년 사이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현장 교사 등의 노력 덕분에 청소년 통일교육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협업으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 넷째 주에 실시된 계기수업에는 전국 초·중·고교 중 94.7%가 참여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도 실시 중인데, 2016년에는 전국 1,072개 초·중·고교 학생 6만8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밖에 참여·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통일리더 캠프 진행(2016년에는 총 38회에 걸쳐 전국 초·중·고 및 대학생 4,300여 명 참여),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정(2016년에는 전국 49개 초·중·고교 지정), 학교 통일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2013년부터 매년 실시), 통일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 담당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등을 진행 중이다.⁴⁸⁾

이처럼 청소년 통일교육 활성화가 학교수업을 통한 북한·통일 관련 지식·정보 습득 증가, 청소년 통일의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다 보면, 결국 대학 통일교육의 효용성 하락, 대학생 통일의지의 저하는 현재 대학 통일교육이 대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양적·질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대학 비율 하락,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편중, 북한·통일 전공학과 축소·폐지 등으로 인해 대학생의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이 떨어져가고 있다.

먼저 선행조사가 이루어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으로만 좁혀서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숫자는 2000년 1,665,398명에서 2014년 2,130,046명으로 늘어났다.⁴⁹⁾ 이처럼 늘어난 대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당연히 전

48) 통일부,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7), pp. 208~215.

49) 2014년까지 꾸준히 늘던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숫자는 2015년 이후에는 2015년 2,113,293명, 2016년 2,084,807명, 2017년 2,050,61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중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국 4년제 일반대학 중 북한·통일 관련 과목 개설 대학 비율도 늘어났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북한·통일 관련 과목을 개설한 대학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2개 중 북한·통일 관련 과목(전공과목+교양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갖고 있는 대학은 총 94개다. 이 중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85개고, 그 중 54개 대학은 학교에 단 1과목만 개설했다.⁵⁰⁾ 전수조사는 아니었지만 한만길 등의 1999년 표집조사 때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대학 비율 72%와 비교하면, 2014년에는 42%로 30%포인트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한 1999년에는 교양과목 개설 대학 중 43%가 2과목 이상을 개설한 데 비해, 2014년에는 2과목 이상 개설 대학 비율이 36%로 떨어졌다.

2016년 12월 현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⁵¹⁾ 대학생들이 교양과목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지식·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은 2014년보다 더 낮아졌다. 당시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대학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2개 중 총 79개로(36%) 2014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2개 이상 교양과목을 운영 중인 대학은 29개(37%)로 2014년과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대학 통일교육이 교양영역에서 후퇴하는 경우, 다양한 학과에서 ‘전공선택’ 과목으로라도 북한·통일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면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접근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0년대 이후 전공과목 개설 학과 ‘편중’ 현상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조사 때 북한·통일 관련 전공과목 개설 학과는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었는데([표 14]), 2014년 당시에다 북한·통일 관련 전공과목 개설 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편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2014년 조사 결과 정치·외교 및 군사·안보 관련 과목이 전체 230개 과목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전공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15]).⁵²⁾

[표 14] 북한·통일 관련 전공과목 (1999년)

대학	전공	강좌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북한의 문학, 북한의 언어학
	사회학과	북한 사회의 이해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 통일문제연구
	경제학과	북한경제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남북한 국어문제, 남북한 현대문학사
	사회학과	한국사회와 통일문제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북한문제연구, 남북통일문제연구, 북한통치이념연구

※ 출처 :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98.

50) 김종수,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5), pp. 131~137;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016), pp. 117~120.

51)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 pp. 328~332.

52) 1999년에 한만길 등은 “각 전공에 북한 및 통일과목을 설치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의 북한의 동향과 통일 이후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지만, 2014년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p. 98.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pp. 117~118.

[표 15] 북한·통일 관련 전공과목 유형별 분류 (2014년)

분류	과목명	과목수	비율
정치·외교	북한학개론, 북한정치론, 북한외교정치론 등	94	40.8%
교육	초등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 등	37	16.1%
사회·문화	북한사회문화론, 북한문화론, 동아시아생활문화 등	27	11.7%
군사·안보	북한학,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북한핵문제의 이해 등	23	10.0%
경제	북한경제론, 통일경제론, 북한농업 등	16	7.0%
법	통일법, 북한법, 북한의 법과 행정체제 등	11	4.8%
기타	통일저널리즘, 북한선교학, 통일환경론 등	22	9.6%
합계		230	100%

※ 출처 :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송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016), p. 118.

한편, 대학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통일 전공학과도 하나둘씩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갔다. 대학은 북한학과 졸업생들이 취업을 잘 하지 못하고 신입생도 많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고, 이 결과 대부분의 북한학과가 폐지되거나 다른 유사학과와 통·폐합되어 2017년 현재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인제대학교만 북한학과·통일학부를 운영 중이다.⁵³⁾

[표 16] 북한학과 신설·폐지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설립순서	학교	설립연도	현황
1	동국대	1994	•2011년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40→20) •2013년 입학 정원 축소(20→15)
2	명지대	1995	•2010년 정치외교학부로 통폐합
3	관동대	1996	•2006년 폐지
4	고려대(세종)	1996	•2017년 통일외교학부로 개편
5	선문대	1998	•2008년 동북아학과로 개편 •2015년 글로벌한국학과로 통폐합
6	조선대	1998	•1999년 폐지
7	인제대	2001	•자기설계학부 중 하나로 통일학부 (연계전공 및 부전공 형태로 운영)

※ 출처 :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 p. 327.

53)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p. 327.

실제로 통일교육협회의 2015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무려 84.7%가 대학에서 통일교육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을 정도로⁵⁴⁾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2017년 5월에 필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대학생들도⁵⁵⁾ 아래처럼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 부족을 토로했다.

“교내 북한학과가 있지만 타과 학생들 사이에서 존재감은 크지 않습니다. 탈북민 관련 교양수업도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학생 B)

“공과대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없습니다. 교내 북한·통일 관련 동아리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지가 낮습니다.”(학생 C)

둘째, 실제 강의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폭넓지 못한 강의 내용, 미흡한 의사소통 등으로 북한·통일 관련 과목에 대한 대학생들의 질적 만족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먼저, 북한 관련 교양과목의 경우 주로 북한 정치·군사·경제 부문에 치중하다보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그나마 있던 강좌도 폐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50여 명이 수강하던 북한학 교양강좌가 2016년까지는 운영되다가 2017년에 폐강됐습니다. 북한 정치·군사 중심으로 강의해서 수강생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학생 E)

“역사·정치 중심으로 강의하는 교양강좌가 있는데, 강좌 후반부에 일상생활 내용도 강의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문학 전공자에게는 흥미를 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학생 G)

다음으로, 강의실에서 교수와 수강생 간에 활발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실증적으로 확인됐었다. 예를 들어 2004년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공부하면서 선생님께 다른 의견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 본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학생 중 80% 이상이 이견을 나타내거나 곤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⁵⁶⁾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7년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필자와 인터뷰했던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강의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사실(fact) 전달을 기본으로 하고, 강사는 토론과 해석을 제안하면 좋겠습니다.”(학생 B).

“교수의 태도와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북한 관련 과목은 보수·진보의 견해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교수가 지나치게 주관적 입장을 강조하면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고, 소통이 활성화되지 못

54) 수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2%였다. Research & Research, 『2015년 대학생 통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p. 35.

55) 필자는 대학 통일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2017년 5월 12일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인터뷰했다. 개별 대학생의 발언은 실명 대신 알파벳으로 구별해서 소개한다.

56)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청소년 통일 무관심 실태와 해결방안』, p. 285.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적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북한 관련 강좌에서는 이점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학생 G)

정리하면, 2017년 현재 대학 통일교육은 ‘접근성’,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대학 자율 통일교육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북한·통일 관련 과목의 절대 숫자는 늘어났지만, 대학생 숫자 증가, 북한·통일 관련 과목 개설 대학 비율 하락 등과 함께 놓고 바라보면 통일교육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또한 강의에 대한 질적 만족도도 강의내용과 의견의 편중성 탓에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V.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안 : 방향과 과제

1. 방향 : 정부와 대학의 유기적 협업

대학 통일교육의 효과성은 최근 몇몇 연구를 통해서도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일반적인 대학생 집단과 교양수업을 통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에 장기 자극을 받은 대학생 집단을 비교한 결과, 후자의 통일의지가 훨씬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표 17]).⁵⁷⁾ 숭실대학교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목 수강생들의 수강 전후 인식 변화도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잘 보여준다. 위 과목 수강 이후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의지, 북한사회의 이해 수준 등은 확연히 올라갔다([표 18]).

[표 17]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 공감도

(단위: %)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		실험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2	26.7	2.0	6.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3.5		4.1	
보통이다	25.5		15.3	
대체로 공감한다	35.5	47.9	48.0	78.6
매우 공감한다	12.4		30.6	

* 통제집단 : JA Korea 주최 전국 대학생 경제교육 워크숍(2012. 5~6) 참여 대학생 597명

** 실험집단 :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약 3개월 수강 대학생 98명

※ 출처 : 김규륜·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66.

57) 김규륜·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5~59, pp. 65~67.

[표 18] 숭실대학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수강 전후 인식 변화 (2015년 2학기)

구분	나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3.05	3.11	2.78	3.59	3.28	2.90
후	3.46	3.60	3.42	4.12	3.91	3.78
△	13.45%	15.9%	22.9%	14.6%	19.0%	30.3%

* 숫자는 리커트 척도(낮음 1점, 높은 5점)

※ 출처 :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016), p. 132.

주목할 점은, 숭실대학교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교양선택과목이 아니라 교양필수과목이라는 사실이다. 숭실대학교는 기존 대학 통일교육이 첫째, 전공자 또는 사회과학 관련 학생들처럼 제한적 대상에게만, 둘째, 정치·군사 같은 내용에 치중해, 셋째, 강사의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토대로, 2014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재학생 전원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2014년에는 옴니버스 강좌 형식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됐고, 2015년부터는 14주 이론수업(온라인), 1주 시험(오프라인), 실습형 프로그램인 ‘숭실통일리더십스쿨’(3박 4일)이 결합된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⁵⁸⁾

숭실대학교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과거 모든 대학에 개설됐던 ‘국민윤리’와 교양필수과목이라는 점은 같지만, 전자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개설된 데 반해, 후자는 정부가 대학에 부과한 의무사항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2004년에 한 연구자가 정부 주도의 대학 필수교양과목 개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⁵⁹⁾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정부 주도 대학 통일교육 의무화는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대학생들의 거부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더 많다.⁶⁰⁾

이와 관련해, 2015년 통일교육협의회는 대학생의 86.2%가 대학 통일교육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었는데,⁶¹⁾ 자세히 보면 당시 대학생들은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대학통일교육(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달리 말해, 당시 대학생들이 생각했던 의무화는 ‘수강 의무’가 아니라

58)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pp. 126~133.

59) 안완기는 당시 중국 동북공정 논란 속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사를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주평화통일’ 관련 교과목을 대학에서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완기, “통일교육의 현황 분석과 내실화 방안 연구: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제33집 (2004), pp. 231~232. p. 236.

60)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pp. 184~189; 김종수,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p. 121.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p. 341.

61) Research & Research, 『2015년 대학생 통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p. 35.

대학의 과목 ‘개설 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²⁾ 대학의 과목 개설 의무화에 대해 수도권 대학생들과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사실로도 대학생이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통일교육 강의 수강 경험이 많은(통일교육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대학생들은 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의무화에 가장 부정적인 반면, 통일교육 강의 수강 경험이 가장 적은 호남권 대학생들은 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의무화에 가장 긍정적이다([표 19]).

[표 19] 통일 관련 교양과목 개설 의무화에 대한 의견

(단위: %)

	개설 의무화		통일교육 수강 경험	
	찬	반	유	무
수도권	83.6	16.4	18.1	81.7
충청/강원권	89.1	10.9	17.5	82.5
호남권	90.5	9.5	5.3	94.7
대경권	84.5	15.5	19.0	81.0
동남권	87.1	12.9	7.7	92.3

※ 출처 : Research & Research, 『2015년 대학생 통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pp. 175~177, 182~184.

한편, 2014년에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의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제8조 ③)는 조항을 “~권장하여야 한다”라며 정부의 권장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는 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는데, 당시 정부는 “별도의 지원 없이 권장을 의무화할 경우 교육수요에 따른 대학의 자율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법률개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⁶³⁾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① 대학생들은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의 의무적 개설까지 포함해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비해, ② 대학의 자율적인 과목 개설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③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은 하되, ④ 정부 역할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논의와 연관 지어 보면, 정부의 대학 통일교육 권장을 의무화하되, 대학 통일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한마디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학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유기적 협업이다.

62) Research & Research, 위의 책, pp. 182~184.

63) 김종수,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p. 121.

64) 2017년 11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 국군 레바논·남수단 파병 연장안 의결,” 「연합뉴스」(온라인), 2017년 11월 27일.

2. 과제

(1) '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정부가 2016년부터 실행 중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앞에서 강조한 대학 통일교육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 중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해 총 4년(2년 지원 뒤 중간평가 실시) 동안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학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권장하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역할은 창의적·체계적인 대학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대학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생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 사업에 공모한 총 31개 대학 중 통일교육 추진여건, 통일교육 운영계획, 향후 발전가능성,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등 6개 대학을 2016년 3월에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했고, 1년차인 2016년에 대학별 재학생 수,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총 18억 원을 적정 수준으로 나눠 각 대학에 지원했다.⁶⁵⁾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2017년 11월 현재 2년차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업 1년차였던 2016년까지만 살펴봐도 대학 통일교육 발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⁶⁶⁾ 아직까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국한되고 있지만, 적어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서만큼은 활발한 강좌 신설, 기존 강좌의 질적 발전, 학내 교수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통일교육 접근성, 교육내용의 다양성 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숭실대학교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유사한 교양필수과목이 자율적으로 개설됐다. 경남대학교는 모든 신입생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과목 '통일과 북한의 이해(사이버강의, 1학점)'를 2017년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에 총 13개 강의주제(1. 통일은 왜 해야 하나요?. 2. 통일비용은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3. 통일사례에서 교훈은?. 4. 통일과 경제협력 공동체. 5. 통일과 평화체제. 6. 통일과 정치통합 그리고 남남갈등. 7. 통일과 마음의 통일. 8. 먼저 온 통일, 탈북자. 9. 통일과 북핵문제. 10. 통일과 동북아. 11. 통일과 남북관계. 12. 통일과 지방. 13. 통일은 대박인가요, 쪽박인가요) 콘텐츠를 제작을 마쳤다.

둘째, 교양선택과목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 경남대학교는 기존 교양선택과목 4개 영역(역사와 철학, 문학과 예술, 과학기술과 정보화, 세계화와 사회)에 더해 제5영역으로 '통일과 북한' 영역(총 12개 과목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4개 과목('북한관광 엿보기', '함께 읽는 북한문학',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 '초코파이 피아노 그리고 통일')을 새로 개발했다. 아주대학교도 교양심화과목으로 '통일한국의 이해'를 신설했고, 기존 교양기초과목이던 '북한사회의 이해'를 정치·경제 내용 중심 강의에서 사회, 문화, 교육, 인권, IT, 에너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강의로 발전시켰다. 충남대학교 역시 2016년에 교양선택과목 3개(북한의 이해, 국제정치와 통일환경,

65) 통일부 공고 제2016-10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공고문" (2016. 2. 1); 통일부 보도자료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6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2016. 3. 18).

66)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에 공개된 각 대학별 1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참조해 정리했다.

분단현실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추가 개발하면서 통일교육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다.

셋째, 여러 전공 학과 교수들의 학내 통일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전공 대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6개 학과(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행정학부,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사학과)가 함께 운영하는 ‘통일 리더십과 개발협력’ 연계전공(학위명 ‘통일학사’)을 신설해 학문 간 융·복합적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6년에 15개 전공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했다. 광주교육대학교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을 계기로 12개 전 학과에서 통일 관련 수업 차시를 1차시 이상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표 20).

[표 20] 광주교육대학교 통일 관련 수업 차시 개발 현황 (2016년)

학과	강좌명	반영요소	필수과목 지정여부	수강생수	개설학점
윤리	도덕과 교육 1	통일관	전공필수	88	2
국어	국어과 교육 1	남북한초등아동문학비교	전공필수	56	2
사회	경제학의 이해	통일후 소비정책	교양필수	90	2
수학	초등정수론	초등수학용어통일	전공심화	29	3
과학	지구과학 및 실험	남북한초등과학용어비교	전공심화	27	3
체육	운동역학	남북한체육시스템	전공심화	28	2
음악	음악 실기 1	남북초등음악이해	전공필수	160	2
미술	미술과 교육	북한의미적요소탐구	전공필수	56	2
실과	발명과 첨단기술	과학기술용어차이	전공심화	28	2
교육	통합교육세미나	남북통합교육이해	전공필수	7	2
영어	초등영어	초등영어통일교육방안	전공심화	28	2
컴퓨터	정보통신 윤리	사이버언어 통일홍보자료제작	교양선택	30	2
계				627	26

※ 출처 : 광주교육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차년도 연차보고서, (2017. 1)

아주대학교도 단과대별 또는 전공별로 1개 이상의 북한·통일 관련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2016년 ‘북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북한 정치·사회개론’, ‘남북경제협력과 통일’ 교안을 개발하고, ‘통일트랙’ 제도⁶⁷⁾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육내용의 다양화, 재학생의 수강 의지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끝으로 송실대학교는 ‘송실통일리더십스쿨’ 때 전공학과(교내 총 42개 학과) 중 참여 의지를 밝힌 교수가 통일시대 자기 전공 관련 비전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통일시대 나의 전공’이라는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 참여 학과 숫자가 2015년 9개 학과에서 2016년 17개 학과(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수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부, 일어일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법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스포츠학부, 기독교학과, 철학과, 독어독

67) 재학생이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합해 4과목(12학점) 수강 시 졸업장에 이수를 명기하는 제도다.

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문예창작학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리하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을 계기로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의 편중성을 벗어날 수 있는 통일교육 모델을 각 대학별로 사정에 맞게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이 초기부터 기존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둘씩 찾아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다양한 통일교육 발전 노력들이⁶⁸⁾ 실제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물론 불과 2년여 동안의 선도대학 운영으로 해당 대학 재학생 통일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도대학이 개발 중인 통일교육 모델의 효과성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주교육대학교는 2016년 11월에 자체적으로 재학생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⁶⁹⁾ 만약 2017년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문항으로 재학생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통일의지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다면,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통일 관련 과목 신설 지원

2016년은 대학 통일교육 역사에서 정부와 대학의 통일교육 협업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기록할 만하다. 앞에서 소개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과 더불어 그해 2학기부터는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이다.⁷⁰⁾

이 사업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다. ‘옴니버스 특강’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전문가 특강,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대학생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통일·북한 강좌’는 대학 정규 교과목(교양 또는 전공)으로 개설돼 한 학기 동안 진행된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아닌 경우 한 개 대학이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좌를 중복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통일 관련 과목 ‘신설’과 그에 따르는 재정·인력 확보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몫이다. 하지만,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학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자율 통일교육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판단은 가능하다.

첫째,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됐다. 2016년 2학기에는 총 10억 원 예산으로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 중 12개 대학에서 옴니버스 특강, 19개 대학에서 통일·북한 강좌가 진

68) 통일교육 선도대학들은 교과 영역 뿐 아니라 국내의 현장체험학습, 통일 관련 교내 행사 개최, 통일 관련 동아리 지원 같은 비교과 영역 사업을 활용한 통일교육에도 주력하고 있다.

69) 광주교육대학교는 2016년 11월 28일~12월 2일 재학생 총 1,39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아래 글 참조. 임현모, “광주교육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통일교육선도대학 선정 전 후 비교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제56집 (2017).

70) 이 사업의 경과, 성과 등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에 공개되어 있는 사업 관련 공고와 보도자료를 참조해 작성했다.

행했다. 2017년 1학기에는 옴니버스 특강 11개 대학, 통일·북한 강좌 16개 대학, 2017년 2학기에는 옴니버스 특강 8개 대학, 통일·북한 강좌 13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다. 수강생 숫자를 보면 2016년 2학기에는 총 5천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강의실과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받았고, 2017년에는 1학기, 2학기를 합쳐 1만 4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통일교육 기회를 새롭게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러한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대학 통일교육의 다양성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개설된 특강과 강좌 제목을 살펴보면, ‘통일시대의 부산광역시’, ‘북한에서 한류와 사회변화’, ‘북한 도시주민의 거주와 경제생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통일준비’, ‘북한 여성의 삶을 엿보다’, ‘4차 산업혁명과 통일코리아 위상’, ‘문화로 여는 통일’(이상 옴니버스 특강),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다문화시대의 통일정책’, ‘IT를 통한 통일’, ‘BT를 통한 통일’, ‘통일경영론’, ‘DMZ의 지정학적 여건과 통일’, ‘남북 문화와 통일문화’, ‘통일과 대학생’,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통일과 생활’(이상 북한·통일 강좌) 등 기존처럼 북한 정치·군사·경제에 내용적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고,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새로운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강의내용의 전문성, 현장성, 대중성 등을 높이려는 노력은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2016년 2학기 수강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생들의 절대 다수인 93%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매우 만족’ 56%, ‘만족’ 37%), 불만족스럽다는 수강생들은 7%(‘불만족’ 6%, ‘매우 불만족’ 1%)에 불과했다. 2017년 5월 필자와 인터뷰했던 대학생들도 공통적으로 옴니버스 특강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생활 속의 북한 알기’는 옴니버스 강좌 형식인데다, 상대평가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pass/fail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2016년에 100명 정도 수강하다 2017년에는 200명으로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강연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총론적 접근은 인기가 없는 편이고, 현재 북한 상황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강의에 관심이 높습니다”(학생 A).

“옴니버스 강좌 ‘현대 북한과 통일한국 : 이해와 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수강하는데 pass/fail 평가로 인기가 많습니다. 타 대학 연합 DMZ 견학도 강좌 안에서 실시합니다”(학생 D)

위의 ‘학생 A’가 말한 과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옴니버스 특강이고, ‘학생 D’가 말한 과목은 당시 대학이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옴니버스 특강이다. 아래에 소개한 두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보면 주별 강의 주제가 다채로워 대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만하다. 여기에 ‘pass/fail 평가’ 방식까지 도입한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생활 속의 북한알기’ 강의계획서

- 과목명 : 생활 속의 북한알기(2017년 1학기)

- 교수명 : 홍○○

- 교과목 개요 : 대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실상을 소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지적 상상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 평가 : 실천적 활동보고서(중간시험 대체) 25%, 기말시험 25%, 출석 50%(P/F과목)

- 주별강의계획

1. 강좌소개 및 (사)1090평화와 통일운동 소개/왜 통일을 이야기하나?
2.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체제의 미래
3. 북한경제의 현황과 장마당의 확대 의미
4. 현장학습1-해병 제8연대(경기 김포), 강화 광성보 등 신미양요 안보 유적지 방문 등 무박 1일
5. 북한의 군사력과 선군주의-당정군의 관계
6. 기적의 김치5-분단을 넘어 화해로/미사일 위협과 THAAD 논쟁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7. 북한인권 실태와 국제사회 해결 노력/우리 정부의 노력
8.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현황과 문제점
9. 휴강
10. 북한의 교육현황과 탈북자 지원 대책-NGO의 역할
11. 현장학습2-육군 제7군단 예하 기계화 시범사격 훈련 참관 또는 국정원 안보견학 및 실탄사격 훈련 무박 1일
12. 북한의 의료 현실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
13. 북한의 보건 현황과 결핵퇴치를 위한 지원
14. 북한의 핵,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통일비전과 국제적 여건 조성
15. 북한알기 토크 콘서트-우수 UCC/현장학습/사회봉사 발표 및 수상

※ ‘현대 북한과 통일한국-이해와 상상’ 강의계획서

- 과목명 : 현대 북한과 통일한국-이해와 상상(2017년 1학기)
- 교수명 : 박○○
- 강의개요 및 교수목표 : 본 강의는 교양 차원에서 현대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 한국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강의는 전공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현대 북한의 실생활과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배우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강의는 명사들의 특강과 더불어 DMZ 견학 등의 체험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공모전(총장상 및 상금 수여)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과목의 성적평가는 P/NP를 적용한다.

- 주별강의계획

1. 강의소개
2. 현대 북한과 통일 한국-이해와 상상력 특강
4. 현장학습
4. Trauma Surgery in Korea Peninsula
5.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체제의 미래
6. 북한 여성의 삶
7. 현대 북한과 통일 한국 프로젝트 기획
8. 중간고사(현장학습 소감문 대체)
9.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생각의 지도
10. 현장학습
11. 기적의 스토리김치5-분단을 넘어서 화해로
12. 제4의 물결과 한반도 통일의 과제
13. 현대 북한과 통일 한국 프로젝트 중간발표와 집단토론
14. 독일 통일의 경험과 한국 통일의 과제
15. 현대 북한과 통일 한국 콘테스트-발표, 심사, 상장·상금 수여, 후기 등
16. 기말고사(통일한국 콘테스트로 대체)

따라서, 옴니버스 특강 지원, 통일·북한 강좌 지원 등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기존에 개설된 북한·통일 관련 과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기존 과목들이 좀 더 대학생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과목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대학의 맞춤형 과목 신설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은 대학에서 양성된 북한·통일 전공 전문가(통일교육 주체)와 현재 대학에 개설된 북한·통일 관련 과목의 양적 ‘부조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폐과 이후 북한·통일 전공학과는 지속적으로 폐지 또는 유사학과와 통·폐합되고 있는 데 비해, 북한·통일 전공 대학원은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신설되면서 성장 중이다.⁷¹⁾ 그런데, 이 기간 대학에서는 오히려 북한·통일 관련 개설 대학 비율이 줄어들면서 북한·통일 전공 대학원 출신 전문가의 강의기회도 함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정부의 대학 북한·통일 관련 과목 신설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받은 과목 신설 등이 이루어진다면 북한·통일 전공 대학원 출신 전문가에게도 새로운 강의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통일교육 주체와 정부의 네트워크 복원 : 통일교육원 ‘대학교수반’ 재개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은 앞에서 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육성 사업,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을 모두 주관하며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업은 국회와 예산 당국의 입장에 따라 사업 규모나 사업 계속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추진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원의 일상 사업 중 하나이므로 안정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두 사업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면서도, 원내 교육과정을 활용한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육원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대학교수반’ 재개다. 통일교육원은 1972년 창설 때부터 2007년까지 과정과 반 이름, 교육인원 등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학교수반’을 원내 교육과정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꾸준히 운영해왔다(표 21). 총 25년 중에 대학교수반이 운영되지 않은 해는 1975년, 1986년~1989년 총 5년에 불과했다. 대학교수반은 운영 초기인 1970년대에 1~2주 간 진행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2~3일 정도의 단기과정으로 운영됐다.⁷²⁾ 따라서, 대학교수반은 대학 통일교육 주체의 본격적 육성보다는 대학 통일교육 주체와 정부의 네트워크라는 의의가 더 큰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학 통일교육이 한창 활성화되던 2001년~2004년에는 대학 통일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열로 나누어 대학교수반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는 2009년 ‘대학교수 통일교육 연찬’(1회 39명) 외에 대학교수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 주체에게 대학 통일교육 관련 정책·제도 등을 소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 대학 통일교육 주체 입장에

71) 2000년대 이후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2002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2005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개발협력학과(2007년),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학과(2008년),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인문학(2014년) 등이 신설됐다.

72)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40년사』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p. 54~58.

서는 대학 통일교육 관련 정책·제도 등을 이해하고, 다른 대학 통일교육 현황을 단기간에 파악하며, 정부에 대학 통일교육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표 21] 통일교육원 대학교수반 운영 연혁 (1972년~2017년)

연도	과정	반명	대상	계획(명)	실적(명)
1972	교육자과정	대학교수반	대학교수	660	649
1973		대학교수반	국민윤리 담당교수	200	197
1974		대학교수반	국민윤리 담당교수 및 교육대학 교수	200	200
1976		대학교수반	국민윤리 담당교수	100	95
1977		대학교수반	각급 대학교수	200	195
1978		대학교수반	각급 대학교수	300	300
1979		대학교수반	각급 대학교수	300	295
1980		대학교수반	각급 대학교수	200	500
1981		전문과정	학교교육요원반	교수(교육대, 사범대) 교감(초·중·고교)	200
1982	통일안보교육과정	대학교수반	대학교수	1,050	1,022
1983	특별연수과정	대학교수반	대학교수	700	663
1984	특별과정	대학교수반	인문·자연계 교수 및 전문대 국민윤리 교수	500	489
1985	일반과정	대학교수반	대학(교) 국민윤리교수, 전문대 교수	80	197
1990	전문과정	학교교육요원반	대학교수	50	53
1991	일반과정	교직원반	대학교수	50	54
1992	전문과정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50	66
1993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50	47
1994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90	215
1995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180	233
1996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180	314
1997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250	229
1998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250	243
1999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250	292
2000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180	179
2001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대학교수반	인문, 사회계열 교수	90	62
			이공계열 교수	90	48
2002		대학교수반	인문·사회계열	45	21
			이공계열	45	21
2003		대학교수반	인문·사회/이공계열	-	-
2004		대학교수반	인문·사회/이공계열	75	-
2005	학교통일교육과정	대학교수반	대학교수	40	0
2006		대학교수반	대학교수	40	36
2007		대학교수반	대학교수	40	25
2009		대학교수 통일교육연찬반	대학교수	-	39

※ 출처 :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40년사』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p. 180~218.

특히, 인문·사회계열 교수 뿐 아니라 이공계열 교수까지 대학교수반에서 교육했던 2000년대 초반은 대학 통일교육 발전기와 일치하고,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과정에서 대학교수반이 사라진 2000년대 후반 이후는 대학 통일교육 침체기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달리 말해, 대학 교수반 운영 확대가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 대학교수반 운영 중단이 대학 통일교육 침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2017년 1학기 항공대학교 교양선택과목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한 차례 출강하면서 대학교수반 운영 재개가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목을 신설한 담당교수는 필자와의 면담에서 2016년 하반기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과정에 스스로 참가해 과목 신설·운영을 위한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을 쌓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담당교수 강의 외에도 그가 통일교육원 교육에 참가하며 만났던 강사(통일교육원 교수,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에 출강한 전문가 등)들의 강의를 결합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대학교수반 운영 재개의 장점이 뚜렷하므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교수반 재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교수반을 재개할 경우 과거보다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대학 교무행정 권한을 지닌 보직교수, 통일교육 선도대학 교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소속 기관 교수, 북한·통일 전공 교수, 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계 교수, 차세대 대학교수(북한·통일 관련 석·박사 과정생) 등으로 대상을 나눠 대학교수반을 운영한다면, 좀 더 내실 있고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도 높은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교과 영역 통일교육 강화

대학 통일교육 영역은 지금까지 주로 살펴본 북한·통일 관련 교과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통일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과 영역에서도 통일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한 대학은 교양필수과목으로 전교생 대상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래처럼 학생들 스스로 ‘통일’을 팀 프로젝트 기반 수업(TPBL) 주제로 선정하기도 한다.

“한 학기 동안 일종의 인식개선캠페인인 ‘○○인성교육’을 진행하는데 통일 관련 주제를 선택해 3학년 40~50명이 분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반활동을 통해 캠퍼스마일리지(C-money)를 적립해 20만원까지 인출 가능합니다.”(학생 F)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고, 이보다는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통일 관련 교내 행사 개최, 통일 관련 동아리 지원 같은 비교과 영역 사업이 최근 통일교육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들 역시 다양한 비교과 영역 사업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모델 개발, 대학생 통일의지 제고 등을 시도하는 중이다([표 22]).

[표 22]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주요 비교과 영역 사업 (2016년)

대학	주요 사업	주요내용
서울대	SNU 통일학교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상호교류와 이해
	통일교과목 연계 현장체험학습	중국 연변, 양안, 백령도·독도 등 현장체험
충실대	통일 글쓰기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책자 제작
	충실토론폰광장	핵무장, 통일한국 수도, 대북 확산기 방송, 금강산 관광 등 주제로 토론
	남북 접경지역 탐방	중국, 베트남 등 탐방
아주대	통일에세이 공모전	학부생 대상 북한·통일 에세이 공모해 시상
	아주(AJOU) 멋진 통일캠프	대학생과 탈북 청소년의 상호교류와 이해
	통일마라톤	사업기간 중 다양한 통일 관련 이벤트 개최
충남대	통일동아리 지원	학생·직원 통일 관련 동아리 5팀 지원
	통일UCC 공모전	통일 관련 UCC 공모해 시상
	통일체험학습	관문점/도라산전망대, 강원 고성/양구 답사
경남대	북한·통일 분야 발표·토론대회	1차 대회 17개팀, 2차 대회 55개팀 참가
	분단통일 해외 현장견학	베트남 탐방
광주교대	통일교육 밤샘독서	통일 관련 책 읽고 토론 및 소감문 작성
	통일교육 멘토링	교수와 학생이 팀을 만들어(44개팀, 교수 44명, 학생 264명) 통일 관련 활동
	통일교육 토론 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	통일퀴즈대회 겸한 토론대회 실시, 통일교육 행사와 영상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통일교육 현장체험	DMZ, 통일역사·문화 관련 장소 탐방

※ 출처 : 각 대학 1차년도 연차보고서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대학생 통일 관련 행사들도 비교과 통일교육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1982년에 시작된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공모사업은 2017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통일 관련 영상 공모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인원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통일리더캠프를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매년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도 실시 중이다.

실제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이상 살펴본 비교과 영역 사업들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고,⁷³⁾ 이에 따라 대학 통일교육 관련 연구들도 거의 한 목소리로 강의실 안팎을 아우르는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강화를 강조한다.⁷⁴⁾ 다만, 통일 관련 현장체험은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73) 이지연, "대학 교양수업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 통일의식 재고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5호 (2013).

74)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충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p. 125.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pp. 346~348. 김홍수, "대학 통일교육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도덕윤리과교육』, 제53호 (2016), p. 119. 이갑준,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pp.

경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체험 전후에 강의·토론·글쓰기처럼 교과 영역에서 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도, 비교과 영역의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통일교육 현장에서 정부와 초·중·고교 협업으로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정 사업과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가 한 쌍으로 진행되고 있듯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과 더불어 정부와 대학의 협업으로 가칭 ‘대학통일교육 연구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이 대회 지원 빈도나 입상 실적 등을 향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심사 때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V. 맺음말

대학 통일교육 발전,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에 애당초 정해져 있는 길은 없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지름길 정도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의 방향, 과제 등을 제안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를 짚어보고, 대학 통일교육 역사를 돌아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국사회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역사를 함께 살펴본 결과, 대학생 통일의식의 오르내림이 남북관계 부침과 함께 대학 통일교육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곧 남북관계 진전 속에서 대학생 통일의지와 낙관적 통일전망이 한창 높아지던 1990년대~2000년대 초·중반은 대학 통일교육 발전기와 일치했고,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대학생의 통일의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후는 대학 통일교육 침체기와 일치했다.

둘째, 대학의 자율적 통일교육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통일 관련 교양·전공과목 증가, 북한·통일 전공학과 신설, 북한·통일 전공 대학원 증가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갔다. 대학 통일교육의 효용성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대학 통일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갔고, 이 영향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효용성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통일 전공학과들도 잇따라 폐지 또는 유사학과와 통·폐합되면서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도 약해졌다. 끝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통일교육 내용의 ‘편중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처럼 2017년 현재 대학 자율 통일교육이 대학생의 교육수요를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사회 대학생들은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대학 통일교육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와 대학의 유기적 협업을 제안했다. 곧 정부가 대학 통일교육 발전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학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대학과의 유기

적 협업 속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은 대학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북한·통일 관련 과목 신설 지원, 대학 통일교육 주체와 정부의 네트워크 복원, 비교과 영역 통일교육 강화 같은 과제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 사업들 중 대학 통일교육 주체-정부 네트워크 복원을 제외한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실행되거나 활성화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대학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 접근성 향상, 교육내용의 다양성 증대, 대학생 참여도와 만족도 증가 같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대학 통일교육을 둘러싼 안팎의 조건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북핵 문제 심화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일’처럼 당장 대학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주제에 매진하는 게 쉽지 않고, 설령 통일교육에 주력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남북 군사충돌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악화되는 학내외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통일의지 제고에 여전히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때마침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통일교육 주체의 부담이 조금은 줄 수 있다. 북한·통일 관련 지식·정보를 학교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습득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에서의 통일교육도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처럼 청소년 통일교육 발전이 대학 통일교육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이 글에서 강조했듯이 정부와 대학의 모든 통일교육 관계자들이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유기적 협업을 해나갈 때 현실화될 것이다. 이 글에서 미흡하게나마 제시한 진단과 처방이 대학 통일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여행에 쓸모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3집 3호 (2015).
- 김규륜·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김중수.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5).
- 김홍수. “대학 통일교육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도덕윤리과교육』, 제53호 (2016).
- 김진환.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호 (2015).
- 박준용. “남북대화가 남북통일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반응연구-한국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구조 분석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제17권 (1975).
-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
- 안득기. “북한 및 통일의식 분석-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 (2011).
- 안완기. “통일교육의 현황 분석과 내실화 방안 연구: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2004).
- 양홍모·이준구. “대학교양 국민윤리 교과운영 실태.” 『국민윤리연구』, 제26호 (1988).
- 이갑준.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 이석재. “대학 교양국민윤리 I의 현황 분석.” 『통일논총』, 8 (1986).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 이우영·한점수·김상한·홍양표. “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의식에 관한 조사와 그 강화책.” 『평화연구』, 제2집 (1977).
- 이지연. “대학 교양수업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 통일의식 재고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5호 (2013).
- 이창우·임경희. “대구지역 대학생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제12집 (1986).
- 임현모. “광주교육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통일교육선도대학 선정 전 후 비교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제56집 (2017).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청소년 통일 무관심 실태와 해결방안』. 서울: 통일교육원, 2004.
-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2호 (2004).
- 조성대. “한국 이념교육의 변천과정과 방향: 대학의 이념교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논문집』, 13 (1984).
- 정세구. “국민윤리교육의 교과운영에 관한 연구: 대학교양 ‘국민윤리’ 교과운영의 개선을 위한 기본 과제.” 『국민윤리연구』, 제28호 (1989).
-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016).

- 최근혁. “대학에 있어서의 승공교육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승공논문집』, 2 (1995).
-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40년사』. 서울: 통일교육원, 2012.
- 통일부.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7.
- 편집부.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제고방안-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안보, 국가현실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6집 (1997).
-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한승조. “국민윤리교육의 회고와 전망.” 『윤리연구』, 10권 (1980).
- 한점수. “대학생의 국가안보 및 질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평화연구』, 제5집 (1979).
- 황병덕.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및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Research & Research. 『2015년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 Research & Research.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6.
- 「매일경제신문」.
- 「연합뉴스」(온라인).
- 「한겨레」.